

전국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재고 요청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의 안전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이미 허가를 받은 사안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긴급 부교육감 영상회의를 열고 각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개인체험학습을 자제해달라는 얘기다.

교외체험학습에는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단체로 떠나는 현장체험학습과 가족여행 및 개인의 교육목적으로 떠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나뉜다.

“안전점검 보장하기 어렵다면 재고” 수능 후 고3 학사관리 상태도 점검

이번 대상 고3학년 학생 10명도 학부모 허락을 받아 개인체험학습으로 여행을 떠났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허락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가 모두 안전점검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체험학습도 본래 교장 허가를 받아 수업으로 인정하는 만큼 신청서와 보고서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특수 사항"이라며 "각 학교에서 느슨하게 운영되지 않았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기고사 이후 고3 학생들의 학사관리 상태도 점검해달라고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출결은 물론 학생들이 이렇다 할 교육 없이 방치되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피해학생이 발생한 서울 대성고 구성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은평구청,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관련 역할을 분담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시도교육청 협의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표하기로 했다.

이날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학교 기숙사와 당직실, 연수시설 등에 쓰이는 가스보일러 시설과 누출경보기 설치 및 기능 여부를 점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1일 경기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모이는 만큼 각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또 고3 교실 학사관리 점수조사 결과와 함께 이번 사고와 같이 단체로 개인체험학습을 떠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현황을 파악한다. 수능 이후 고3 학사관리 우수 사례 개선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뉴스스

‘플라스틱 수거’ 바다 청소기, 청소 실패

태평양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고 4개월 전 투입된 ‘바다 청소기’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네덜란드 비영리 재단 오션클린업(Ocean Cleanup)은 9월 샌프란시스코항을 출발해 10월 ‘대(大)태평양 쓰레기장’(Great Pacific Garbage Patch)에 도착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장치 ‘시스템 001’이 쓰레기 수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지름 1.2m, 길이 600m인 U자형으로 수면 아래 3m 길이의 차단막이 붙어있다. 해류를 따라 바다를 떠다니면서 플라스틱을 모으는 원리로 연간 바다에서 50t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시스템 001’은 쓰레기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유지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관계자는 “시스템 001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종종 쓰레기보다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모아왔던 쓰레기가 빠져나가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치 개선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치는 재단 창립자인 보안 슬라트(24)가 10대 시절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한편 ‘시스템 001’의 최종 목적인 대태평양 쓰레기섬은 해류를 따라 바다를 떠다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섬처럼 모인 것으로 약 1조8000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구성됐다. 면적은 텍사스주의 2배, 캘리포니아주의 3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바누아투 아기, 세계 최초 드론 운반 백신 맞아

남태평양의 오지 바누아투의 생후 한달 짜리 아기가 세계 최초로 드론으로 공수한 백신을 맞았다고 유엔 국제아동기금(UNICEF)이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백신은 바누아투섬 서안에 있는 디공만으로부터 40km 떨어진 곳의 오지 쿠크만 부근 험준한 산악지대에 드론으로 운반되었고, 이 곳에서는 18명의 어린이와 5명의 임신한 여성들이 간호사로부터 백신을 접종받았다.

조이 노와이란 한 달 된 아기는 운송계도 세계 최초의 드론운반 백신을 맞은 아기로 기록되었다.

쿠크만 일대에는 아주 작은 마을이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 전기도 보건 의료도 없으며 도로, 또는 작은 보트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유니세프는 설명했다.

유니세프의 엔리에타 포어 사무총장은 보조자로부터 “오늘은 작은 무인기 한 대가 지구 보건에 큰 결실의 도약을 선물한 날”이라며 “세계가 아직도 오지에 있는 어린이들의 방역을 위해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데, 드론 기술은 마지막 거리를 날아서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약을 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백신은 일정 온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물질로서 스티로폼 상자 안에 아이스팩과 함께 포장했으며, 백신 사용가능 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이를 경고하는 전자 장치까지 부착되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바누아투 보건부는 지난 주부터 유니세프의 지원을 얻어 2명의 드론 조종 인원을 배치 받아 오지로 백신을 수송하는작업을 펼쳐왔다.

중 항모 개발 주역 스파이 혐의 처벌

중국의 항공모함 개발 주역이 뇌물 수수,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형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검찰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최근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중국선박중공(CSIC) 전 사장 순보(孫波)에게 담적과 공직 등시 박탈 이른바 ‘쌍개(雙開)’ 처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기율위는 또 “순 전 사장은 뇌물수수 및 직원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그는 이미 검찰 기관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중앙기율위는 순 전 사장을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순 전 부회장은 중국선박중공에서 선박 설계와 제조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2009년 다렌조신소 사장을 맡았다.

2015년 3월 후원밍(胡瑋鳴) 회장에 이어 중국선박중공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

다수의 소식통은 SCMP에 “그는 중국 첫 항공모함 라오닝호 건조와 연관된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 당국에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거나 선고 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스

성범죄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시행됐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총 9개 부처 30만5078기관 193만5452명에 대해 실시했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은 체육시설에서 3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교육시설 19.85%, 게임시설 16.03%, 경비시설 14.50% 순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된 131명 중 종사자 71명은 해임됐다. 운영자 중 43명은 기관폐쇄, 17명은 운영자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총괄부처다. 매년 중앙행정기관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여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해임요구와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동지팔죽 새알빛기 절기상 동지를 사흘 앞둔 19일 오전 부산 부산진역 광장에서 대한적십자 부산지사 자원봉사원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임직원들이 노숙인 등에게 대접할 팔죽에 넣을 새알을 빛고 있다.

‘운창호법’ 첫날 음주운전 300명 넘어

18일 하루 전국 323명 적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운창호법’ 시행 첫 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23명(잠정 수치)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8건이었고, 부상자 40명에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하루 평균 476명이 적발된 것보다는 약 30% 감소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얼마

나 위험한 행동인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적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운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유발을 ‘살인죄’ 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장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래는요...
자녀치로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